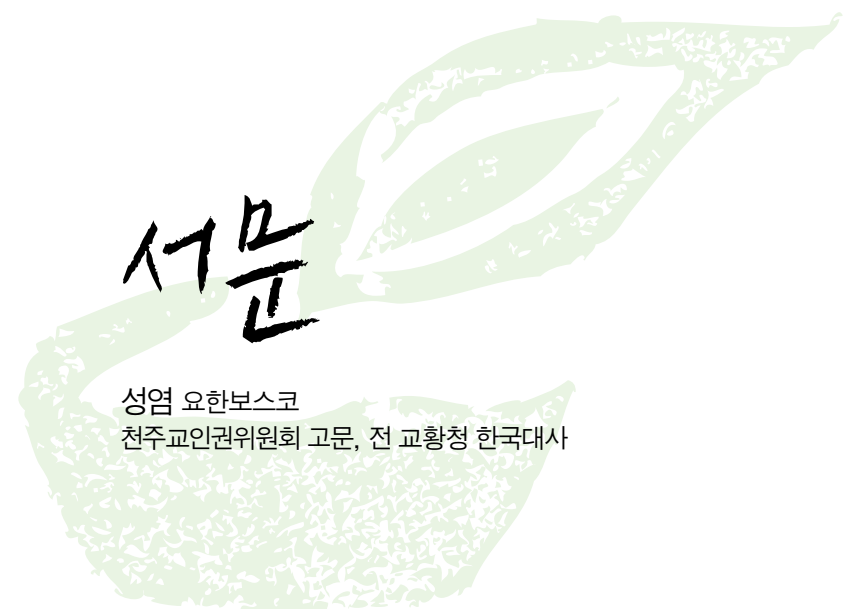


2014 서른세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성염 요한보스코
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전 교황청 한국대사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이사 52,7) 예언자 이사야가 인류에게 예고한 저 ‘기쁜 소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5월에 성인품에 오르신 요한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일컬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달리 그리스도교라고도 일컫는다.” 이 성인이 내리는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한 마디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경탄이야말로 세계 안에서 행하는 교회의 사명을 결정합니다.”(인간의 구원자 10) 참으로 교회는 ‘인권의 보루’입니다.

교회는 이제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하느님의 외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무엇 하러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게 하셨다.”(루카 4,18)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활 첫 설교를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하셨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에서 이 대목을 찾아 읽으시면서 당신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에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 각종 범망에 쫓겨 불의하게 “잡혀간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낼” 사람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사정당국에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파렴치한 관제언론에 매장당하고, 부당하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국민을 옹호해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명동성당 뒤편에 ‘천주교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와 수도자, 자매와 형제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다수의 변호사들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과 사무국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기소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변호 등의 법률구조 활동으로, 군사독재 하에서 조작된 증거와 고문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로, 부당하고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국민의 인권과 평화를 깨뜨리는 정부와 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맞서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앞장서 노력해 왔습니다.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곁으로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온 평신도 단체입니다.

옛 로마인들은 “법령 없이는 법정의 없다(nullum ius sine legibus).”는 격언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사회가 도래했다는 막연한 의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신장시키는 구체적 입법 활동, 특히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재판과 공평한 판결로만 법정의가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을 그대로 둔 채로 기본 인권인 사상의 자유를 운운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처음 제보를 받아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진실이 드러난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국정원, 경찰, 군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과 투표를 조작하면 국민은 국가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기본권을 유린당합니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정의를 유린한 정권은 국민을 법률로 다스릴 사법권을 갖지 못한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회의 사회복음에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불의를 비판하고 그 불의에 희생당하는 국민을 편들어 사법적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도직 단체입니다. 물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응원 해 주시는 후원자들 덕분에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을 감당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신도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뜻으로, 우리 주교님들은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해서 모든 교우들이 국민 된 기본권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라고 독려해왔습니다. 또 2011년부터는 우리 주교님들이 ‘인권주일’이 낀 한 주간을 ‘사회교리주간’으로 제정하여 교우들이 믿음과 삶을 하나로 통일하는 사회교리를 배우라고, 신앙으로 고무된 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회와 그 제도들을 정의롭게 복음화 하는 사명을 이행하라고 재촉하십니다.

지난 8월에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한국 평신도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교회의 사명 수행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2014.8.16.일 ‘평신도 사도직 지도자들과 만남’에서 행한 연설).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률, 경제와 교육, 언론과 가정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는 일”이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은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로 끝났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신 교황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시자마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셨고, 광화문 시복미사 전에도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셨으며, 귀국길의 비행기에서 “교황님, 거 노랑 리본 좀 떼세요. 남의 나라 정치에 중립을 지키셔야죠.”라는 투의 기자의 질문에 “타인의 고통에는 중립은 없다!”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방송 3사가 24시간 중계하는 화면 앞에서 300명의 젊은이를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바다 속에 몰살시킨 대한민국 사회의 최악상을 꾸짖으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온 국민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깨우치시는 이런 가르침을 ‘교황의 사회교도

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도권에 순종하여 우리 주교님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사회복음을 가르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 ‘마음의 평화’나 우리 피붙이의 건강과 출세만을 빌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국현안에 모른 채하는 신앙생활을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속물근성의 신심생활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웰빙 종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웰빙 종교’나 ‘번영의 신심’을 갖고서는 주님의 복음에 담긴 ‘참된 기쁨’을 찾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찾는 길이 무엇인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의 기쁨을 되찾으려면, 가난한 그리스도의 살을 만져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살입니다”(2013.5.8).

오늘 교회의 ‘인권주일’은 우리가 가난한 그리스도의 살을 만져보라고 초대받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2014년 인권주일 강론집 ‘교회와 인권’에 강론을 집필하신 분들의 정성이나 여기에 실린 강론원고들을 바탕으로 본당에서 강론을 행하실 분들의 노고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이라고 외치는 이사야 예언자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7일간의 ‘사회교리주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한겨레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참 기쁨을 배우는 주간이요, 한반도와 지구상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리스도의 살을 만져보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관심에 가톨릭교회가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사제, 수도자, 자매, 형제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인권위원회로 시작하여, 1993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독립 출범하여 올해로 활동 26년, 창립 21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간첩’들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작간첩사건들의 진상규명활동과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버렸던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여년의 노력 끝에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을 이끌어 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조작과 고문으로 만들어진 간첩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에서 총기사건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 군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했고 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권단체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의 발족을 이끌며 군인인권기본법, 국방감독관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전면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JSA 의문의 죽음 ‘김훈 중위 사건’을 비롯하여 군복무 중 사망한 수많은 죽음들의 진실을 밝혀냈던 군의문사대책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복무환경성 사망자’들의 국가유공자 청구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군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젊은이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명예회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제도폐지 운동,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의 악법 폐지 운동, 반전 평화운동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증거 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검찰, 경찰, 교도소 등에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오랜 시간 끈질기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온갖 차별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폭력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집을 짓기 위해 집을 부수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환상에 밀려 점점 도시의 변두리로 쫓겨 가는 서민들,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살며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생활인들의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감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교만을 접어두고,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하며 싸우고 함께 비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국가폭력 피해의 상징이 되어 버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S), 시멘트와 항공모함에게 바다와 구름비 바위를 빼앗기고 감귤 농장 대신 경찰서와 구치소를 오가야 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K), 살려고 올라간 망루에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가족들의 시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용산참사 유족들(Y), 평생을 일구어 온 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76만 5천 킬로볼트 송전탑을 막아서다가 경찰들에 사지가 들러 내쫓기는 칠십, 팔십의 밀양 주민들(M)이 바로 이 땅의 하늘입니다. ‘SKYM_쌍용·강정·용산·밀양’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곁을 지켜야 할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단 한명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꾸짖자는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 역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해야 할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때 까지, 유족들의 의혹이 해결되고 마음속 깊은 곳의 한이 풀어질 때까지,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들 곁을 지킬 것입니다.

아시아 가톨릭의 정의평화단체들과의 연대와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하고 체험 하게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지구적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사형폐지 활동가들과 살인피해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300여건의 무료 인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 진행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곳곳이 이겨내며,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낌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유현석 변호사님과 이돈명 변호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지난 5년간 50여건의 중요한 공익소송들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세차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이돈명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함께 보다 성숙하고 공신력 있는 공익인권단체로서의 외형적 조건들도 갖

추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4년 10월 창립총회를 갖고, 2005년 6월 1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하여 같은 달 16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자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부금을 낸 후원회원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후원회원 분들이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02-777-0641) 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가야 할 길, 가야하는 길을 가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습을 지켜 내겠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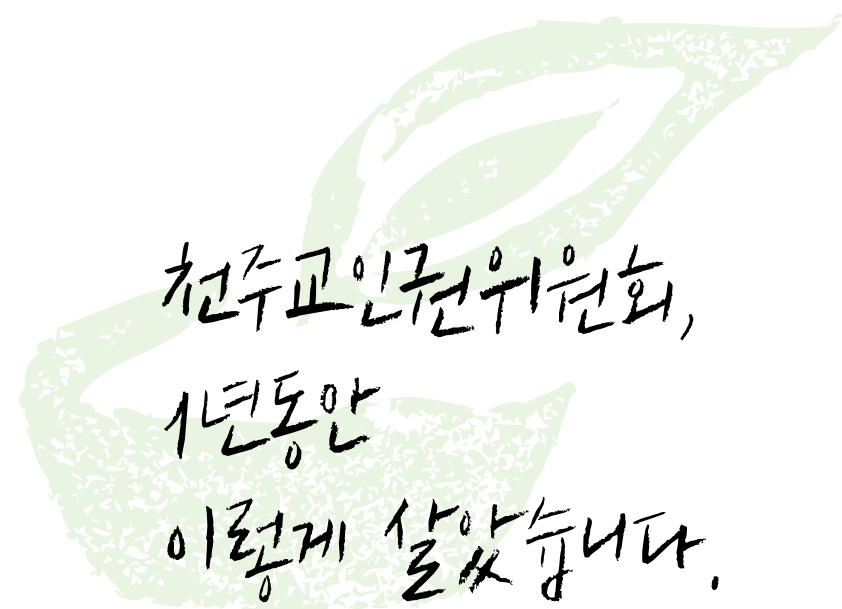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겨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김소월, 초혼 (招魂)





공익소송팀

•월요 무료법률상담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명동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교우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든 공익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 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합니다. 현재 57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2014년 5월에는 ‘故유현석 변호사님 10주기 추모미사 및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연대사업팀

2014 <인권과 평화, 그 달콤한 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과 3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사무국, 위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2월 24일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월간 소식지 개편사업으로 2013년 12월호부터 일부 컬러로 전환하고 접지방식을 변경하여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들이 함께 인권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져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문화모임을 갖자는 취지로 8월부터 ‘두부한모’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사법연수원생 무료법률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업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 25주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최초의 가톨릭 청소년용 인권교재 「모든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을 출간하였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삽화, 그리고 각 항목마다 사회교리를 인용하여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교재 출간과 함께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인권 교육과 사회교리 강좌도 기획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인권정책팀

2014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 연속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6강의 강의와 마지막 토크쇼로 마무리된 인권 강좌는 공동선, 국가폭력, 정보인권, 사상·양심의 자유, 안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 강좌마다 30여명의 수강생들이 꾸준히 참여하였고, 마지막 토크쇼에는 그동안 강좌를 듣지 않았던 분들도 함께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강좌 이후, 연속 사업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15

년 상반기에도 연속 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 존엄과 안전위원회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평등팀, 안전대안팀, 자유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등팀은 평등한 애도, 평등한 지원을 큰 줄기로 잡고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생존 화물기사, 이주민 유가족, 일반인 생존자, 민간 잠수사, 진도 어민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존재를 드러내는 활동으로 한겨레 21 연속 기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대안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부터 되짚어보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유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의 옹호와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반대를 기조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킹센터, 한국진보연대와 우리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팀은 세월호 주요 집회시위에서 인권 침해 감시단 활동과 함께 △경찰폭력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채증단 운영 △인권침해 보고대회 및 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 제기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활동 △청와대 방문 시민들에 대한 불법연행 사건 대응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청와대 CCTV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진행했습니다.

•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실종자가 16명이던 지난 6월 초중순 경부터 매주 금요일, 서울 대한문에서 팽목항을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기다림의 버스 참가자들은 팽목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이름 부르기, 진도VTS관제센터까지 침묵행진,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28사단 윤일병 구타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가 공동행동에 나서는 첫 번째 연대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입법과제와 입법운동의 방향을 논의했고, 9월 2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추진했습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진 출범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의 목표로 군인 인권 기본법 제정, 군사법원법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 국방감독관제 또는 군옴부즈맨 등 독립적인 군 감시 및 조사 기구의 설립,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을 주요과제로 삼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등 군 자체 개혁기구들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9월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들을 위한 추모의 밤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으며, 공동행동은 입법, 모니터링, 대중캠페인 등의 3가지 태스크 포스트를 설치하고 1차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2005년 여야합의에 의해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으나 폐지법률 부칙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보호감호제에 대한 반대 활동, 최근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제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법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개방형 화장실에 관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신검열 금지,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 확대, 교정시설의 도서 반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사건으로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및 CCTV 국가배상청구 사건,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사건, 전주교도소 공안사범 서신검열 사건, 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이발 지시 불이행 징벌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이후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23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반대 운동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2014년 4월부터 4개 농성장에 대해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통보함에 따라 전국대책회의는 비상체제로 운영되어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집행되기까지 농성장 지킴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과 종교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십대의 카메라로 불법 채증하는 등 인권 침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날 20여 명의 주민, 활동가 등이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두 명은 고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오전 11시에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저녁에는 밀양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밀양 주민들과의 연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연대버스, 밀양의 친구들 미니팜 협동조합 주최 밀양장터, 고 유한숙 어르신 장례식, 에너지 관련 3대 악법 개정을 위한 상경 투쟁 등에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9월 20일 개최된 밀양송전탑반대활동 법률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에는 2천명이 넘는 이들이 방문했고, 1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참사 증언대회와 헌법소원 청구

지난 6월 25일 국회 간담회실에서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참사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하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정청래, 장하나, 진선미 의원실과 밀양법률지원단 및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국회의원 5명(정청래, 장하나, 진선미, 김제남, 남윤인순)을 비롯하여 밀양 주민 30여명, 연대 시민 및 수녀님 3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행정대집행 때 벌어진 참상을 고발하였습니다. 7월에는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강제 퇴거되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및 연대자 117명이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고, 책임자 처벌과 사죄를 받아내고자 헌법소원청구서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촉진모임의 형태로 모임을 전환하여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인권중심 사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촉진모임은 기존의 인권회의보다 조금 더 열린 형태로 진행되어 소속단위가 아닌 활동가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행동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북, 공권력, 노동, 차별 4가지의 키워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존엄과 안전위원회 활동의 매개로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 평화활동 중 발생한 벌금과 법률비용의 모금과 집행을 주관하기 위해 강동군 전 강정마을회장님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를 창립하고 3월 후원주점을 개최하여 3천만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그 전신인 강정벌금 TFT의 활동으로 총 1억 5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이중 1억여원을 벌금 또는 법률비용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활동가들이 과도한 벌금에 항의하며 자진하여 노역형을 택하는 등 저항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이 있었고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재판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대책회의는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피해를 중장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3번째로 열린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매일 400여명, 연 인권 2000명이 넘게 참여하여 제주 도청을 출발하여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에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하였고, 주민들은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민주적인 절차 등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효성과 방식 등의 논의를 위한 마을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의가 진행되는 중, 강정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을 위한 공사가 불시에 시작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24시간 농성을 하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616가구의 관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만㎡ 미만에 해당되는 72세대 규모 6,400여㎡만 우선

적으로 고시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등은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설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자회견과 도청 항의방문 등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매년 진행되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해군기지 관련 예산 대응과 제주도정이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제주해군기지 불법해상공사 감시활동을 해오다가 구속되었던 박도현 수사(예수회)가 6개월여의 복역 후 석방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정현신부(전주교구), 김성한신부(예수회)가 연행 되어 유치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봉헌되는 생명평화미사가 계속되고 있고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와 화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전국의 교구와 수도회에서 당번을 정해 주관 해 오고 있습니다. 9월 26일~28일에 강정마을과 서귀포성당에서 열린 <2014 강정 평화 컨퍼런스>에 천주교연대가 후원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북아 군축평화 - 신학적 성찰과 상황 분석”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9월 29일~30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3주년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29일 미사와 작은 문화제 후에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의 주례로 <강정 생명평화 사목센터 기공식>이 열렸고, 저녁에는 강정주민들, 지킴이들과 함께 의례회관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30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의 인간띠잇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강정생명평화사목센터는 기공식 이후 원활하게 공사가 진척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전국 본당을 순회하며 강론과 물품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금 약정과 후원금 모금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인권과 평화, 그 달콤한 연대>

3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2월 24일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흔에서 후원의 밤 행사와 3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수상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역사에서 500일이 넘는 긴 시간동안 농성을 지속하면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점들을 널리 알려내며 장애와 가난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외치며, 연대를 필요로 하는 다른 현장들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고자 긴 시간동안 이어온 활동으로 3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후원의 밤과 시상식 축하공연으로 가수 백자, 강허달림의 공연이 이어졌고 김형태 이사장의 책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북콘서트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4회 천주교 정의평화환경 활동가 연수

2014년 7월 3일~4일에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제4회 천주교정의평화환경 활동가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평신도단체 실무자 등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 정신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정보 교환 및 활동에 따르는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친교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평신도 시국관련 단체 연대로 구성된 '5대종단 평신도 시국공동행동'에 참여하여 국정원 등 대선 불법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주교열사 합동추모제를 봉헌하며 열아홉분의 천주교 열사들을 기리고 뜻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시범개장을 강행함에 따라 여러 천주교 단체들과 함께 용산화상경마장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용산지역 주민들과 성심여중고 학부모, 교사, 성심수녀회와 연대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한국천주교 평신도 단체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안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선언'을 함께 진행하여 천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130,190인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너무 많이 들으셨을거라서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힘이 드실 때는 비축하시고, 너무 힘들실 땐 힘내지 마세요. 우리 힘빠질 땐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들 힘빠졌으면 저희가 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과 증오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제동



신행일치(信行一致)

- 한국 신자들에게 주신 교종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주원준
평신도신학자, 한남성서연구소

들어가며

교종이 떠나신지 넉 달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종의 가르침’이 증발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돌아보면, 갑작스런 방한이었다. 한반도에는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아직 세상도 교회도 바뀌지 않았다. 가톨릭 행정의 특징인 일사불란(一絲不亂)함은 광화문과 성지를 향한 군중 동원에서 멈춘 것일까.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에 응답하는 일은 그저 ‘각자’에 맡겨도 되는 것일까. 소중한 가르침도 교종을 따라 한반도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신자유주의의 미디어가 다스리는 대중은 특정한 기억을 더 빨리 망각한다(그래서 필자는 우리만이 냄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종 방한의 인상적이고 감격적인 그림과 단어는 벌써 희미해진다. 필자는 이 글에서 사회교리 주일을 맞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몇 가지 장면과 구절을 새삼스레 되새겨 보고 싶다. 교종의 가르침을 곱씹고 실천하는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행일치(信行一致)

그분은 믿음과 실천의 일치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좌우의 경계를 넘는다. 우선 한국사회의 진보세력이 그분처럼 말했으면 좋겠다는 예술가 이철수 선생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 근본적이고 날카롭고 직설적이면서, 동시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 비난과 조롱과 독설이 없는 그분의 돌직구는 울림이 깊을 뿐이었다. 울림은 공감을 일으켰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작은 화법의 차이 뒤에는 삶과 인간에 대한 태도, 신앙, 영성 등이 있다. 우리도 행함에서 믿음과 자비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주류는 교종이라는 도전에 엄중하게 직면했다. 교종의 메시지를 십 수개의 안전가운데 하나로 ‘처리’하든가, 특정 부서에 ‘전담’시켜 버리든가 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교종이 걱정하셨던 그대로다). 그분의 메시지가 과연 개인적 사치 문제나 추상적 담화에 머무르는 것인가? 중산층의 교회를 염원하는 내면의 힘은 안팎에서 드세다. 믿음과 실천을 분리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의 가르침이 소멸할 위기라면 지나친 기우일까.

한국 교회의 초대 공동체

교종은 이상적으로 평등한 공동체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 주셨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사회적 신분의 차별과 상관없이, 믿는 이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초대 교회의 삶(사도 4,32 참조)에서 영감(靈感)을 받아, 한국의 신자 공동체들 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 강론, 2014년 8월 16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첫째 ‘이상적 공동체상’을 우리의 고유한 전승 안에서 찾는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전하는 사도들의 공동체는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이미 실현하였다는 점은 그다지 익숙한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신자도 적었다.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순교 시대에 조선조는 저물었다. 연이은 기근과 가뭄이 들었지만 국가의 공적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당시의 조선이 지금의 소말리아보다 낫지 않다. 탐관오리(貪官汚吏)와 가렴주구(苛斂誅求) 같은 단어로 연상되는 그 시기는 민란이 끊었다. 동학을 진압할 군대를 외국에서 꾸어야 했던 정부였다.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목숨이 속절없이 죽어 나갔다. 정의 없는 나라는 결국 소멸했다. 그 당시 ‘천주학쟁이’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가난한 교우촌을 일구었다. 그리고 그 교우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살기 위해서’ 교우촌을 찾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등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일군 믿음의 조상들이었다.

필자는 이 강론을 읽고 참으로 새삼스러웠다. ‘어지러운 세상에 교우촌에서는 굶어죽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 여러 번 읽었고, 잘 알고 있던 사실인데, 왜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자주 언급하면서 우리의 전승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전승을 뚜렷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둘째, 신자 교육에 시선이 간다.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실현한 적이 있다는 기억이 분명하게 전승되어야 한다. ‘순교’와 ‘평등 공동체’가 동시대에 동일한 주체가 이룬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후손임이 교회 안에서 상식화되거나 최소한 신자의 필수 교양 지식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복음적 정체성, 믿는 대로 실천했던(信行一致) 삶이 한국 천주교의 고유한 전승이라는 말이다.

한반도의 용서

교종은 명동 성당에서 남북이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복음으로(마태 18,21-22) 강론하셨다.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하고 비실용적이며 심지어 때로는 거부감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강론,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명동 성당)

용서는 통일로 가는 길이다. 복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통일의 걸림돌이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교종은 대략 세가지 종류로 나누셨다. 첫째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종류다. 남과 북 사이에는 용서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끊임없는 대결을 통한 일방적 승리뿐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여기 속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 당국과의 상호 용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평가이다. 결국 실질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과 포기를 동반한다. 셋째는 가장 감정적인 반응으로, ‘빨갱이와 용서라니? 나는 못해!’의 태도이다. 이런 류의 강한 거부감은 거리의 선동이나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나 일부 종편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태도의 대척점에 교종은 ‘십자가의 용서’가 있음을 가르치신다. 원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박해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곧이어 교종은 쉽고도 분명하게 바로 이게 메시지라고 밝히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한국 방문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화해시키는 은총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나가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임’은 믿음이고, ‘타인들과 나누는 일’은 실천이다. 믿음과 실천의 일치, 실행일치의 삶이 한반도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이다. 한국 교회가 제1의 과제로 살아야 할 복음의 금과옥조 아닐까. 교종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되던 날.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버스’ 참가자들은 마음을 담아 분필로 바닥에 적었습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 왜 자꾸 들먹이나 했더니 '적당히'가 통할 수 없는 4·16특별법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힘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맞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희생자 수가 많아서 때문만은 아니다. 몇 가지 장면을 다시 짚어보자.

#1. 4월 16일, 해경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에 기울어져 침몰해가는 배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할 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생존 학생들은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해경은 구조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해양구조 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외주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업무를 해야 할 정부는 구조현장에 없었다.

#2. 세월호 선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과적으로 인해 배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선사 측에 전달했다. 물론 무시되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 구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청해진해운이 과적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 세월호 운항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선원들의 위험 경고는 자본의 탐욕 앞에서 힘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3. 선박운항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은 한국해운조합에서 맡는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주회사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단체이다. 선주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해운조합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이니,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조타기가 고장나도, 과적을 해도 아무런 제약없이 출항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정부가 안전관리 업무를 민영화한 단면이다.

#4. 서해페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노후선박의 운항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2009년, 여객선의 선령제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했을 때 1인승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1인승무제는 여전하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1인 승무제는 확대되었고 무인역사 등 역사 근무인력은 대폭 감축되었다. 이게 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오로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을 본다. 규제완화니, 민영화니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정

부의 무능과 추악함을 본다.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해체되어 버린 참담한 현실을 본다.

그래서 '참사'다.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기에 참사다.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결탁하고 있으니 참사다. 그 결과 존엄한 삶의 권리가 박탈당했으니 참사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주 무겁고도 엄중한, 그렇지만 반드시 시민들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시민들의 특별한 각오가 담겨 있는 4·16특별법

지난 7월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4·16특별법안'이라 함)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소위원회는 진실규명을 담당한다. 일정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제1소위 상임위원으로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과 기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2소위원회는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3소위원회는 피해자의 치유와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4·16특별법안의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당연하게도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의 실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교통사고'라고 말한다.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확한 진실규명 없이 몇몇 하급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적당히 보상금만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심보이다. '세월호=교통사고'라는 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의 무능함과 기업의 탐욕을 시민들이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정치공작 언어이다.

4·16특별법이 '특별'한 이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각오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능과 병폐 그리고 기업의 탐욕이 대형참사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모아진 것이 바로 4·16특별법이다. 그러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점검해 보자.

[과제①] 자본의 이윤추구에 갇힌 '안전'을 구출하자

세월호 참사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논리를 앞세운 자본의 탐욕과 정치권력의 야합이 빚어

낸 참담한 재앙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은 두 말 할 것 없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써야 할 돈을 줄이고 각종 친기업적인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추구를 조장해 왔다.

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안전비용을 줄인다. 안전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은 감축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터 곳곳에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은 기업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등의 명분으로 방지되고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축적된 위험이 결국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세월호 참사는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첫째,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1993년에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 핵심은 기업의 안전업무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가스, 유독물 등 안전보건 관리자의 법정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업들은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롯한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대폭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 논리에 따른 안전 인력의 감축과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증폭시킨다.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최적이낙찰제 등으로 근본적인 비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회사인 코레일테크는 90%의 인력이 비정규직이다. 간접고용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직율도 높기 때문에 정비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대로 담보될 리 없다. 게다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철저한 갑을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설비교체나 근본적인 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이렇게 축적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객선에 대한 선원 안전교육과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 점검 등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주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한다.

여객선 선주 회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해운조합이 선사들을 상대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 우스운 민영화도 또 있을까 싶다. 그 덕분에 세월호는 아무렇지 않게 화물 과적을 일삼을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세월호 출항보고서에는 차량 대수 등 화물의 적재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단 여객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신호기 오류였다. 열차의 신호시스템을 설치·유지하는 일은 '유경제어'라는 민간업체로 외주화되어 있고, 철도신호 시스템의 안전점검은 철도신호기술협회라는 곳에서 한다. 이 협회는 철도신호 시스템을 제작하는 민간기업 477개사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이다. 200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철도시설의 모든 안전점검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셋째,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제도의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산재나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정작 기업과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하급 책임자인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기업의 조직구조와 사업주의 결정이 안전사고의 원인임에도 기업과 사업주는 법적 책임의 시야에 전혀 포착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000~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고 기업이 내야 할 벌금은 그저 비용으로 치부될 뿐이다. 사내도급사업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사업주가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삼성 불산유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청주 SK 폭발사고(8명 사망) 등에서 원청 사업주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 4명이 사망한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의 경우 원청업체가 받은 벌금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과제②] 안전에 관한 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늘렸다. 선주 회사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한 것이었다. 해운조합이 2007년 7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선령제한이 완화된 덕에 청해진해운도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하여 선실을 개조한 후 별다른 규제없이 운항할 수 있었다.

철도 차량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노후화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2012년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고속철도 30년, 일반철도 20~30년이었던 내구연한을 아예 폐지해 버렸다. 노후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한 것도 동일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모두 130번의 사고·고장을 일으켰으며 2007년 수명 연장 이후에도 5차례나 가동이 정지되기도 하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덩어리' 취급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의 명목으로 친기업적 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국민들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월 21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제816회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그는 규제완화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이유로 규제개혁의 불씨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증가한다는 식의 논리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자본의 비용절감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제③] 안전한 삶의 권리를 향한 시민의 저항적 실천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존권과 모든 인권의 기초이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책무가 바로 안전한 삶의 권리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안전한 삶의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은 작동을 멈추었다. 그러니 "이것이 국가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가는 '이윤을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자본의 국가'일 뿐, 더 이상 국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라는 말은 이제 흔한 용어가 되었다. 그 단어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관료사회의 부패함을 표현해 준다. 그런데 이는 단지 몇몇 정부관료들의 추악함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다. 관피아의 본질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동맹에 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역대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규제완화정책과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민중들의 노동·생활현장의 안전문제를 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의 논리에 복속시켜 버렸다.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비용절감,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하여 기업의 자율과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들이 사적으로 감수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하향조정되어 왔다. 그것을 부추기면서 부패한 이익을 뒤흔들며 챙긴 자들이 바로 관피아다. 그러니까 관피아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조장하면서 기생하는, 무책임하고도 반헌법적인 정부 그 자체이다.

안전한 삶의 권리는 '인간다운 삶', '존엄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자본의 논리에서 구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활·노동현장에서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적 의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기업이 노동현장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기업의 돈벌이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폐기하는 것,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것,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공동체 등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안전한 삶의 권리를 향한 이 모든 사회적 과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저항하는 치열한 시민행동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

안전한 삶의 권리는 그저 국가의 보은을 구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시민의 주권자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제이며, 그러니까 저항의 권리여야 한다.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안전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4년 9월 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강론글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군대 내 인권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우리 사회에서 군대와 인권은 언제나 엮박자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국가안보를 빙자한 군사 기밀이라는 이름의 비밀주의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대사회를 일반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놓는다. 그 속에서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서 멸사봉공을 외치며 충성을 다짐하는 체제가 형성되고, 여기서 군인이란 전체의 한 부속물이거나 주체성을 상실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규정된다. 자기 삶의 주인이기에 누려야 하는 인권은 그래서 이 군부대 안에서는 군더더기 내지는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점은 냉전체제에 편승하였던 지난날의 군사정권에 의해 다시금 강화된다. 분단된 체제의 안보를 위해 전 사회가 또 다른 병영으로 변질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군대는 일반사회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성역으로 등장한다. 지역사회의 통치단위였던 기관장회의는 군부대의 장이 최상석을 차지하였듯이, 작업복을 대신하였던 교련복이나 예비군복은 군사문화가 우리의 일상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상징처럼 보여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외쳤지만, 실제 군대는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시험이었기보다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민을 양성하는 훈육과 통제와 장소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군인의 인권이라는 말은 그 본연의 의미를 획득한다. 인권이 억압과 통제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해내기 위한 외침이라고 본다면, 우리 군의 현실은 문자 그대로 인권의 정반대편에서 저항과 도전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체로부터 학습한 폐쇄적·반인권적 규율체제를 바탕으로 폭력과 비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던 군 내부의 문제점들은 ‘군의 특수성’이라는 명분 하나로 그 질곡의 상태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시대를 거스르며 진화를 멈춘 채 여전히 ‘요지부동(搖之不動)’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군의문사나 수많은 병사들의 자살사례들, 최근 초미의 관심을 모은 군대내 구타·가혹행위의 문제 등은 그 징후로 읽히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들이 인류역사를 통해 피와 눈물로 일구어낸 인권의 규범들이 저항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2.
독일을 본받아 흔히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권의 차원에서는 “제복 입은”이라는 말은 허사(虛辭)에 불과하다.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은 군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복을 입든 안 입든 인간이기에 보장되는 권리는 한결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대 안이라고 해서 바깥과는 다른 인권목록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군의 특수성’에 따른 인권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당하며 병영생활을 하여야 하며 복장이나 행동거지에서 수많은 규율에 복종하여야 하며 군사작전과 훈련 등 원치 않는 직무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의 특수성’은 인권을 넘어서는 상위의 가치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군인의 인권을 대체하고 그 위에 군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무반군기라 통칭되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선임병에서부터 후임병으로 대물림되는 통로가 이 내무반군기라는 점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직무시간 바깥에서 또 다른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군인의 휴식권은 직무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휴식의 공간인 내무반은 새로운 군사적 규율의 훈육장이 되어 이 휴식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보장되어야 하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이 내무반 생활과정에서 여지없이 부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부 일탈적인 군인들에 의해 예외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율에 의해 공인되고 있으며 군 수뇌부는 이를 ‘군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관심병”이나 군대부적응자라는 공식적인 범주는 군사상의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인뿐 아니라 이렇게 사적인 생활을 부정해버리는 내무반생활 그 자체의 반인권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인까지도 포괄한다. 은연중에 내무반군기가 공식적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기개발을 하거나(발전권)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며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런 망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최대의 금기사항이다. 군의 특수성이 어떤 것이기에 이러한 휴식권이나 사생활권, 발전권, 문화권 등과 같은 인권들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한은 왜 이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는지, 어떤 사정이 어떻게 변하면 이 권리들을 보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등등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저 복종할 것만이 강요되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억지에 기반한 강요 때문에 ‘군의 특수성’이라는 답론은 허구가 되어버리거나 혹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 왜 우리 군인은 ‘불온도서’로 낙인찍힌 책들은 읽지도 보관하지도 못해야 하는지, 왜 우리 군인은 안전에 관한 명령을 기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는지, 왜 우리 군인은 “하면 된다”식의 억지명령을 무조건 복종할 의무만 있지 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정당하지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하는지……. ‘군의 특수성’이라는 말은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저 군은 특수하니까 군인의 생활도 특수해야 한다는 동어반복 수준의 억지만이 횡행할 따름이다.

3.
군이 외부의 통제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인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에, 그래서 자신들의 비합리성, 자의성이 폭로될 수 있기에 그들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외부적 통제장치도 철저히 부정하고자 한

다. 인권의식도 인권보장의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상명하복의 획일적 규율에만 중독된 상태에서 군사조직을 구성하다보니 “군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휘권에 대한 도전이자 그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게 되는 터에, 이러한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민간인이 군대 안에 들어와 군인들과 상담, 교육하며 그들과 대면하여 진정을 받는 것, 나아가 군대에 대해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시정권고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정녕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집단)항명으로까지 비화되는 절대금기의 사항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런 금기의 그물 속에서 군은 점점 더 고립되어 시대를 역행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헌법의 명령도, 민주적 법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당위도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절대성역으로서의 군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 군의 개혁은 군인의 인권보장체제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군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이런 군대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있어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설령 인식한다 하더라도 분연히 나서서 비판하고 고발하는 의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오로지 충성만을 외치며 권력에 복종하는 군사기계만이 존재할 뿐이며, 그래서 국민에 봉사하며 국민의 의지에 복종하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군대만이 부유할 뿐이다.

최근 군대 내에서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실이 연발하면서 시민사회에서 군인권법 혹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그리고 군사법원체제 자체의 대폭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논의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들은 ‘군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은 채 군인의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틀을 모색하며, ‘군의 특수성’ 담론 속에서 자칫하면 지워져버릴 수 있는 군사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을 제대로 구축해 내고자 한다. 군이 특수한 만큼 인권의 보편성 역시 중요한 헌법요청임을 강조하면서 군의 폐쇄성과 비밀성을 법치주의와 문민통치의 원칙에 따라 교정하려는 노력 또한 그에 포함된다. 군옴부즈맨 제도를 고안하고 군대 안에 설치되던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거나 혹은 그것을 대법원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은 군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통해 건군 이래 한번도 제대로 개혁한 적이 없는 우리 군의 적폐들을 하나하나 털어나가는 최선의 대안이 된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 군대는 비로소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군대가 되어 정의와 민주와 평화라는 우리 모두의 이익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4.

최근 발생한 군 내부의 사건들은 우리 헌정체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을 던진다. 민주화의 성취를 자랑해 왔던 우리 시민들로서는 과연 지금의 현실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였던 헌정주의의 틀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게 만들었다. 물론 여전히 권위주의의 잔재는 남아 있고 우리속의 군사문화는 아직도 그 위력을 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민주와 평화의 요청이 저 군부대의 철조망 너머에서는 한 장의 종이보다도 가벼운 것이 되어 있다는 인식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군 내부의 폭력과 가혹행위들과 그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사건·사고들은 하나같이 군사

문화의 파행성에서 연유한다. 전근대적인 가부장적·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여전히 잔존하면서 상명하복(上命下服)식 지휘권이라는 명분하에 군 내부를 장악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그런 군사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제도가 아직도 완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이런 군사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아예 불문율화하면서 모든 군인들의 행동지침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현재의 양상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건의 축소·은폐와 미봉으로 일관하는 대응책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기에 ‘입헌주의적 군사체제의 구성’이라는 말은 최근 우리 군에 집중되는 시대적 요청들을 집약한 의제가 된다. 그것은 군인의 인권보장을 필두로 하여 군이 ‘지휘관의 지배’를 벗어나 ‘법의 지배’ 속에서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헌법명령을 말한다. 그래서 군을 고립된 갈라파고스의 섬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리고 이런 틀을 통하여 군인의 지위를 군사기계의 수준에서 ‘병영 안의 시민’으로 복원시키는 것, 이를 바탕으로 군 내부에 법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구어내어야 하는 진정한 군사개혁방향이 된다.



김준한
신부, 밀양 감물생태학습관 행정부관장

밀양과 청도

송전탑 싸움 시즌 2의 탈핵과 공동체의 의미

김준한
신부, 밀양 감물생태학습관 행정부관장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표현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보람 있는 노동을 잊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그런 노동자들이 바라는 수많은 원의를 한데 모아본다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모습으로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밀양과 청도로 대표되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이나 핵발전소가 들어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어쩌면 돌아갈 고향이 더는 없습니다. 옛날 송전탑이나 핵발전소가 들어오기 전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그 목가적인 시골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어르신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짓던 과거로 하루빨리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위로도 격려도 아닌 본의 아닌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싸움이 일상이 되었고, 개발주의에 중독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혁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할 바에는 송전탑도 핵발전소도 부득이하게 이고 지고 살아야 하는 참담한 오늘과 내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현실에 굴복하여 암울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이어가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반도의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계속해서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점에서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싸움은 이 시대에 탈핵과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탈핵

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거치면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명제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 안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곧 사랑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기계적인 중간 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한 가난한 이들에게로 좀 더 기울어진 지점일 필요가 있다는 교회의 자기 성찰의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탈핵은 제일 먼저 피폭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사고가 일어난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무차별적으로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환경재난으로 인한 난민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핵과 관련해서도 그 피해는 모두에게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그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건만 두고 보더라도 당장의 피해 앞에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재산 상으로만 보더라도 큰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살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피난을 갔다가도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돌아오거나 아예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증언을 따르면 피난소로 피난을 간 사람 중에 어쩔 수 없이 핵사고의 피해를 수습할 작업원으로 취직하여 피난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곧 대도시의 전력수급을 위해 멀리 떨어진 시골에 지어진 핵발전소로 인해 사고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수습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이중, 삼중의 재난을 맞이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탈핵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그리스도교적 명제에 비추어 피폭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싸움을 거치면서 그 핵 발전으로 인한 가난한 이들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소가 지어지고, 그 전기를 아주 먼 대도시까지 송전하기 위해 수만 개의 송전탑이 온 산하를 거치되, 반드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거주지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할매들과 할배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핵 발전은 태생적으로 이 사회를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로 양분하고, 모든 피해와 위험을 가난한 이들에게 부과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체로 불의한 에너지 시스템인 핵 발전은 모든 선의의 사람들까지도 원치 않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폭력에 가담시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불의한 에너지를 향유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구조적인 악입니다. 바로 그렇게 밀양과 청도는 송전탑 싸움을 통해 핵의 위험성과 그 현실성을 훨씬 더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며, 탈핵의 영역을 대단히 확장시킨 이 시대의 소중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양과 청도를 기점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송전탑 싸움은 현재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라는 전국단위 연대체로 거듭나 밀양, 청도, 당진, 횡성, 신경기 변전소 후보지(양평, 여주, 이천, 광주) 등 송전탑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주민을 하나로 묶어 탈핵을 위한 저변 확대에도 대단히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는 재생과는 다른 모습 것입니다. 주님의 발현을 목격한 모든 제자의 증언에서 일치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이 바뀌었고, 그래서 살아생전 그렇게 가깝게 지낸 그들조차도 그분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조리와 싸워가며 하느님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려는 공동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한 묵상에서 밀양과 청도가 하나의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저항하는, 그래서 정의로운 공동체는 결코 과거의 반복이 될 수가 없

습니다. 밀양의 경우만 두고 보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 싸움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골 특유의 텃새에 기반한 원주민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공고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10년 넘게 이사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서 살아가더라도 원주민 문화권으로 유입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땅을 갈아먹고 살아가는 농민은 도시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개발세력의 침입 앞에서 자연스럽게 원주민과 이주민의 새로운 연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곧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땅의 무게를 조상 대대로 느끼며 본능적인 생태적 감수성을 품고 살아온 원주민과 그 생태적 가치를 무언중에 공유하고 그 땅에 적극적으로 섞여 들어와 살아가는 이주민은 더 이상 구별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결합만으로 송전탑 싸움의 공동체적 가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송전탑이 결국 핵발전소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도시의 전력 과소비 문명을 떠받치기 위한 가난한 자의 소외현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떠안은 도시 연대자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밀양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이는 결코 홀로 그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결코 균질의 거대한 규모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동기와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차츰 서로에게서 점점을 발견하여 때로는 느슨한 형태로나마 연대의 사슬을 이어갈 때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반드시 이전의 공동체를 분열시켜 그들을 대립시키며 투쟁의 강도를 무디게 해 왔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소통을 통해서만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과편화시키고 개인주의로 포섭하면서 다수의 소외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열책동은 많은 경우 그 효과를 잘 발휘해왔지만 결국 어느 한 곳의 고통이 결국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든, 혹은 그 고통에 기대어 본의 아니게 자신이 불의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연대의 틀은 넓고 깊게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밀양과 청도에서 목격하게 되는 명제, 자신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역과 출신, 그리고 이해관계 이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 자신 안에 선의의 열망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공동체에 동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침묵하던 다수는 불의에 항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더구나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은 어느 것 하나 외파로 어두운 그늘 아래 팽개쳐두지 않으시고 서로 감응하도록 섭리하셨으니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새 세상에 대한 꿈을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 싸움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더 이상 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과 대책위는 쉽 없이 움직이고, 연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한전의 소송으로 재판정을 드나들며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잘못된 법률(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주법) 개정을 위한 법률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며, 생업을 포기하며 싸움에 투신했던 어르신들의 삶의 회복하기 위한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미니팜 협동조합 밀양의 친구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더 이상 제2의 밀양과 청도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차원에서 다른 고통 받는 지역의 송전탑 싸움과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연대에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어찌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양과 청도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잣대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의 희망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껏 싸워왔던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며 다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6월 11일 밀양 송전탑 반대농성장 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저항해 온 밀양주민들에게,

정부와 한전, 경찰과 밀양시청에 소통을 요구하며 연대하던 시민들에게

국가는 그저 야만으로 답했습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의료민영화

자본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사회

변혜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민영화는 없다.” 바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내 놓았던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원치 않는 민영화는 없다”며 복지와 민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아버지’ 라고도 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는가, 대통령이 되고 공약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매일 매일 고된 노동을 해도 빠듯해져만 가는 생계 때문에 내 가족의 안전과 건강만 지켜준다면 하는 바람으로 그를 뽑은 분들도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간절한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임기 채 1년도 되지 않아 모든 복지와 민생 공약을 배반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비참해졌고, 사회는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생계 비관형 자살도 늘고만 있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웬일로 흑자가 났다. 8조원 정도의 돈이 남은 것이다. 항상 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란다고 보혐료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정부는 “관리를 잘 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남은 돈이었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탓이다. 살기가 빠듯해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인 ‘비용’이 병원을 이용하는 비용 이었던 셈이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보장성은 절반 밖에 안 되니, 본인부담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무서워 병원에 잘 가지 못한 것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복지와 민생 정치는 내다팔아 버리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름하여 ‘투자활성화 대책’ 이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고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자 유치”라는 표현으로 민영화 방안을 포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이 방안에는 한국의료를 잣대미로 만드는 각종 영리화와 민영화법이 포함돼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는 말이나, ‘투자를 유치’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활성화 방안’ 같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 “경제가 돌아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정부는 바로 그 점을 노려 투자활성화라는 내용 안에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 방안을 감추어 진행하려 한다.

이 때문에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사실 평범한 많은 이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 분야의 상업화와 민영화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의료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방안은 ‘투자자’ 들이 의료에 돈을 투자해 때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런 투자자들에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과 재벌들 그리고 부자들의 투자처에 의료 내 주는 방안들뿐이다.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허용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영리병원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공공의 통제를 받지 않아, 진료비를 맘대로 매기고,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말한다. 이런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비영리병원마저도 이런 영리화된 의료행위를 쫓는 경향이 있어, 미국에서는 ‘흡혈귀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지적된 바 있다. 누가 먼저 영리행위를 시작했는지도 모를 만큼 고가의 치료비를 받는 행위가 다른 병원들까지 감염시키는 경향을 지적한 말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재정마저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은 환자를 못 받는 것으로 만들더라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부추기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특세를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대신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방식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이중 부담체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 할 것이다.

5,400만명, 인구의 1/5이 무보험상태인,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바로 민간보험회사와 영리병원들이 만들어 낸 재앙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 되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자, 박근혜 정부는 첫 민영화를 영리병원이 아니라 ‘영리자회사’라는 방식으로 변형시켜 시도했다. 병원이 직접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이 의료기기회사나 의료용구회사, 건강식품회사를 소유하고, 그런 기업들이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과 다름없다.

예를 들어보자. 모병원인 S병원의 자회사가 수익을 더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투자자를 더 많이 모으려면, 당연히 병원에서 그 자회사의 상품을 더 많이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한다. 환자치료와 직결된 의료용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회사를 병원의 자회사로 허용하는데, 과잉진료 즉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처방과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의사들이 권유하는 건강식품이나 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환자들이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환자 치료와 직결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아픈 환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과 부담을 떠안기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며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의료특허

이런 이유로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반대하는 국민서명을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박근혜 정부는 200만명이 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악해 통과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또 하나의 비민주적인 방식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정식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행정조치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3권 분립이라는 법치주의조차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도 현행법인 모법의 의료법은 분명히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 허용을 추진하면서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하위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꼼수는 한 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바로 이어 지난 9월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다. 두 번째 의료민영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6차 투자활성화에는 의과대학병원을 영리주식회사로 만드는 ‘의과대학기술주식회사’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해 의료특허와 임상시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의과대학병원들을 주식회사로 만든다는 말은, 사실상 대형병원 전체가 영리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대형병원들이 모두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병원기술주식회사는 의료특허를 강화해 의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사들이 의료특허를 허용해 의료기술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선전한다. 지금은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어서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치료기술이 더디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이 특허로 별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돈 때문에라도 새로운 치료기술을 열심히 개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무심히 들으면 이 말은 사실처럼 들린다. 요즘 의사들은 돈만 더 준다면 뭐든지 할 것처럼 생각되기 한다. 병원이 너무 상업화되었고,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환자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탓이다.

하지만 돈으로 사고파는 의료특허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의료기술은 단 하나의 의사의 노력으로 혁신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란 지난 수 백년 간 인류의 여러 경험의 축적된 산물이다. 선행된 여러 연구들 위에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치료 경험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치료제와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다.

따라서 의학은 언제나 그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선행 연구나 치료기술에 대한 논문과 수술법을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의학 기술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독점되는 의료특허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수술법과 진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의료특허를 가진 교수나 의사에게 정보를 사용하는 특허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실제의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차세대 젊은이들과 연구자들이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거나 자료에 접근을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자유롭게 공유되던 인류의 자산과 과학이 돈에 의해 감금되고 차단되고 독점되는 것이 바로 의료특허다.

게다가 의사들의 수술법과 진단방법에 특허가 생긴다면 환자들은 진료비 외에 특허비용을 또 지불해야 한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박근혜정부가 또 하나의 선택이 아닌 ‘특진비’를 개설하는 것이 바로 의료특허제도이자,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의 본질이다.

이런 의료특허와 대형병원의 기술지주회사를 위해 임상시험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지 않는 줄기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전 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기업들에게 팔아넘기는 조치다.

이미 서울은 2년째 전 세계 임상시험 1위의 도시다. 대형 암병동이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병

원의 상업화가 낳은 결과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과 치료에 대한 감시와 규제이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 규제가 아니다.

얼마 전 법령정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병원을 사고파는 인수합병 법안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대놓고 이제 ‘의료로 먹고 살자’면서 대기업들과 투기자본까지를 병원 투자에 꺼들라고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이 사고파는 물건처럼 취급된다면 병원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위해 이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 이윤율은 결국 환자 등골을 빼는 방식이거나 안전한 치료를 위해 필수인력인 병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건강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권리다. 의료민영화는 건강권을 파괴하는 조치이자,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는 만드는 일은 지금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는 일과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2014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1. 앞의 다섯가지 주제를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일 강론을 필요로 하시는 본당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강론단 파견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권주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본당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매달 엄선한 인권 사안을 중심으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교회와 인권」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 교회와 그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내 최초의 가톨릭 청소년용 인권교재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을 출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인권이야기를 쉽게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시와 삽화를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사회교리를 인용하여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작비에 준하는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권주일 강론 뿐 아니라 본당의 각종 모임 또는 교육, 특강 등에서 인권강의가 필요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02) 777-0641 chrc@hanmail.net



“땅이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으리라”(창세기 8, 22)

인권주일 2차헌금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찬미 예수님 !

매년 참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만, 올해는 어느 해와 비교 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나름 최선을 다해 동분서주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밀양과 청도에 송전탑을 지으려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임병장 총기사건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과 사고들은 아들 가진 부모들을 모두 분노하게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내린 결정을 대법원은 ‘과기환송심’이라는 한 줄로 뒤집어버렸습니다. 환풍구 위에 서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소화기 하나 없는 펜션에서 화재로 숨진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봄 우리는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하여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를 슬픔과 분노, 무기력과 절망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일본에서는 운항 할 수 없는 배를 한국에서는 운항이 가능케 했고, 그 웅색한 운항은 규정이나 절차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관행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커다란 사고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전문가도 없고 숙련된 사람도 없으면서 정보를 차단하고 쓸데없는 고집들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한 채, 배가 가라앉고 국민의 분노가 성난 파도처럼 온 나라를 뒤덮자,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유족들을 부둥켜안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고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한 수사를 펼치고 전국의 통반장들을 동원하여 현상수배를 했지만 세월호의 주인은 주검이 되어 나타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며 눈물 흘리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의 요청과 주장을 묵살하고 갑자기 사법체계의 수호신이 되어 유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처럼,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용산참사가 일어나게 만든 직접적인 책임자를 공기업 사장에 임명해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한 것처럼, 평생을 살아온 땅에 세워

지는 초고압 송전탑을 막아보겠다고 양상한 뼈만 남은 노구를 이끌고 산에 오르는 밀양 할매들을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밀어붙인 것처럼, 해군기지를 지으면서도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마을 안에 군 관사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 해 놓고 기습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 모르게 공사에 착공한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진 이들은 세월호 가족들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모른 채 했습니다. 자본과 권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노동자들의 현실도 못 본 척 합니다. 굴뚝 위에 올라 200일을 살아도, 광고탑 위에서 칼바람에 온몸을 휘청대며 현수막을 들고 호소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이런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는 참 모진 시간들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과 평화라는 달콤한 연대를 꿈꿉니다. ‘인권’, ‘평화’, ‘연대’ 이 단어들은 지금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말해주고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이 되어줄 열쇠 말이 분명합니다. 서른세 번째 인권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세 단어를 떠올려보며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해봅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억압과 차별, 고독과 소외를 감당하며 고통 받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입고 계시던 옷이라도 벗어 그들의 몸을 덮어주시며 따뜻한 밥 한끼 함께 나누셨을 겁니다. 갑자기 노숙인 한분에게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은 있지만, 밥을 같이 먹어 주는 사람은 없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밥을 사주는 사람들이었는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었는지 돌아보는 인권주일을 보내야겠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우리는 중립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4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새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부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한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이 모여 서로 연대하며 모두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더디지만 힘 있는 발걸음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복음의 실천을 고민하고 나누고자 서른세 번째 인권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주일에도 인권주일 강론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내드리고, 요청이 있으신 각 본당에 가서 인권주일 강론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인권주일 강론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의 의미>

를 짚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와 존엄한 사회>, <군대 내 인권침해와 사법제도 개혁>, <밀양송전탑 싸움과 탈핵의 의미>, 그리고 <의료민영화의 심각성>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강론단의 파견을 원하시는 본당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02-777-0641)으로 강론을 요청하시고, 미사시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권주일 2차 헌금 후원 및 인권주일 특별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부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오직 각 본당에서 보내주시는 인권주일 2차 헌금과 후원회원님들의 후원회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히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로번호 7618893
국민은행 004-01-0724-877
우리은행 454-035589-13-101
우체국 010017-02-544517
농협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인 김형태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홈페이지 cathrights.or.kr